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3년도 제4호

체육시민연대 칼럼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2019-2023)의 성과와 의의

강원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생활체육, 엘리트스포츠 간 상생이 필요한 이유

김용수 강원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슈포커스 - 한국 체육계 이대로 안 된다

반복되는 체육계 비리 근절 위해 “컨트롤타워 필요”

권현원 스키아데일리 기자

어른 욕심에 멍든 학원, 장애인 체육.. 사회 관심 기울여야

신성수 스키아데일리 기자

위기의 스키장

겨울 대표 스포츠 불황 그늘... 부활 몸부림

이상학 연합뉴스 기자

2024 파리올림픽

“러시아 나오면 올림픽 안 나가” 우크라이나, 스포츠 외교도 강경 대응 예고

김지수 엑스포츠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2019-2023)의 성과와 의의¹⁾

2019년 발생한 스포츠미투 운동은 한국 사회의 엘리트스포츠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 제기를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나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한 자정작용에 대한 기대를 넘어 외부 기관과 전문가의 참여로 확장되었다.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조직 중 하나가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이라고 할 수 있다. 특조단은 범국가적 스포츠인권 대응조직으로 2019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1년간 한시적 조직으로 출범해 매년 운영연장을 통해 2023년 2월 운영 종료로 예정되어 있다. 본 칼럼은 지난 4년간 특조단의 역할과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조단은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 및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국가 차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조사, 연구, 권고, 의견표명, 인권침해 구제, 실태조사, 인권교육 및 홍보, 인권 관계 기관과 협력,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정비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특조단은 체육계로부터 독립적이고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조직으로 역할을 하였다.

특조단이 남긴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운동부 및 체육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전수조사를 포함한 실태조사(10회), 둘째, 종목별 현장 심층 조사(10회), 셋째, 선수인권보호체계 및 대학운동부 폭력문화 개선에 대한 직권조사(2회), 넷째, 장애인, 여성, 학생선수 등 대상별 정책권고(8회), 다섯째, 정책권고에 대한 이행점검(102개소 286개 기관 대상), 여섯째, 스포츠인권 캠페인 및 플랫폼 혁신 등이다. 이를 년도 별로 살펴보면, 첫째, 1단계(2019년)는 특조단이 보호기관 및 정책 실천 기관으로서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였다. 이를 통해 현장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전수조사 등 실태조사(초중고, 대학, 직장, 유도, 빙상, 장애인, 학교운동부지도자, 체육관련단체 종사자, 여성, 합숙소 등), 대회 모니터링(4종), 진정 및 상담창구 구축 운영, 직권조사(스포츠인권보호체계)를 실시했다. 둘째, 2단계(2020년)는 정책 실천 모델을 구축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정책권고 4종(학생, 직장, 유도, 빙상), 현장 심층조사 10개 종목(체조, 근대5종, 유도, 태권도, 수영, 테니스, 야구, 농구, 축구, 자전거 등), 직권조사(대학운동부 폭력문화 개선), 온라인 기반 교육콘텐츠 개발을 실시했다. 셋째, 3단계(2021-2022년)는 체육문화 및 관습의 변화 주도, 스포츠인권 개념의 다각화 등 스포츠 패러다임 전환 도모를 위해 노력했다. 정책권고(장애인, 여성스포츠지도자) 및 이행점검, 캠페인 ‘스포츠인권선서’ 1만 명 달성, 대외소통 플랫폼 혁신, 스포츠인권 의제 다각화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동안 특조단이 수행한 실태조사, 정책권고, 심층조사, 권고 이행점검, 직권조사, 모니터링, 인식개선, 인권교육 등 종합적인 인권증진 활동들은 일부 엘리트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현장의 인권정책에 대한 반발론자들과 스포츠인권옹호론자들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정책권고와 이행상황 점검, 현장의 지원 등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현장의 변화를 직접 주도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과제를 남겼다. 특조단의 활동들은 정부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인 인권위의 체계적 정책 결정 기반과 인권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견고한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 점에서 특조단 운영의 종료는 뼈아프다.

¹⁾ 본 칼럼은 <김현수, 홍덕기(2022a).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범국가적 대응조직의 성과와 과제 I :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의 진단과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61(4), 323-342.>와 <김현수, 홍덕기(2022b).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범국가적 대응조직의 성과와 과제 II :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의 인권침해 구제와 보호를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61(6), 247-260.>을 요약한 것임.



생활체육, 엘리트스포츠 간 상생이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의 체육·스포츠는 크게 학교체육, 엘리트스포츠, 생활체육의 세 갈래로 나뉜다. 한때 엘리트스포츠의 관문으로 여겨졌던 학교체육은 학생의 인권보장이 되지 않는 입시위주의 체육이라는 문제점 때문에 현재 많이 위축되어 있는 형편이다.

먼저 학교체육은 교육 기관의 책임 하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시행하는 체육으로, 교과로서의 체육과 체육 활동이 포함된다. 엘리트체육은 전문적인 체육활동을 말하며 우수선수의 발굴, 육성을 통해 대회의 성적달성 목표가 있는 순위를 위한 운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자국선수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막대한 인적 자원과 자본을 스포츠에 투입하며 첨단 과학과 체계적인 훈련을 지원함으로써 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선수가 아니라면 평소에 접하기 힘든 운동이라 하겠다.

엘리트스포츠는 국민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위를 높인다는 점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체육인 육성중심에 지나치게 치우친 체육구조의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지나친 성적위주의 잔혹한 시스템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국민은 대리만족으로서 소수 중심의 스포츠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엘리트 체육만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지속적인 복지향상에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생활체육은 일상 속에서 운동을 함으로 개인, 조직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약수터에 나와 함께 운동을 하는 70대 노부부에서부터 체육관에서 선수 못지않은 기량을 뽐내는 동호인, 방과 후의 체육교실, 어린이 축구교실까지 그 범위가 넓고 다양하다.

이렇게 엘리트스포츠와 생활체육은 그 성격은 각자 다르지만 체육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목표와 이상향은 같다. 따라서 전체국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통한 복지확대에 체육정책방향의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엘리트스포츠와 생활체육은 유기적인 관계를 도모하며 함께 발전해야 한다.

지역주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 또한 체육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기획(plan)-실행(do)-분석(see)의 과정을 거치는 게 정책의 제대로 된 프로세스다. 엘리트스포츠에 몸담았던 선수들도 그 후엔 다시 생활체육으로 돌아온다. 결국 일생동안 생활체육을 하며 엘리트스포츠를 거쳐 오는 것일 뿐 선을 그어 생각하는 발상은 체육활동의 건전한 정착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엘리트스포츠와 생활체육이 서로 협력하는 상생의 길을 택하여 체육으로 인해 온 강원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활력이 넘치는 사회가 올 것을 기대해 본다.

반복되는 체육계 비리 근절 위해 “컨트롤타워 필요”

계묘년 새해 벽두부터 체육계 일각에서 제기된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체육계가 또 다시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 그동안 체육계에서는 병역 비리 의혹뿐만 아니라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사건 등 굵직한 사건·사고들이 주기적으로 발생해 왔다.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체육계 비리 등의 근절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포츠윤리센터 기능·권한 강화 필요성 커져

체육계에서 잇을 만하면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와 비리를 막기 위해 전문가들은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 강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체육계의 인권 침해와 비리 근절을 목적으로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는 2020년 8월 기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의 신고 기능을 통합해 공식 출범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에 나설 수 있다. 또 실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고발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스포츠윤리센터가 가진 권한은 직접적인 징계 권한이 아닌 징계를 ‘요구할’ 권한으로 제약돼 있는 실정으로, 실질적인 징계 결정 권한은 체육단체 등에 있다. 실제로 그동안 이뤄진 징계 수준이 스포츠윤리센터가 권고한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돼 왔다.

이러한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및 권한에 대한 지적은 설립 이후 꾸준히 지적돼 온 사안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의원실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설립 이후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요구한 111건 중 실제로 징계가 이뤄진 것은 46건에 불과했다. 특히 스포츠윤리센터 측에서 사안이 심각하고 반복적으로 이뤄져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요구한 30건 중 자격정지 등의 중징계가 이뤄진 건은 13건에 그쳤다.

또한 전체 111건 중 ‘소속 체육단체 처리 중’이라며 소송 등을 명분으로 징계를 미루는 건은 56건에 달했다. △2020년 징계요구가 내려진 사건 중 9건 △2021년 징계요구 내려진 사건 중 36건 △2022년 징계가 내려진 사건 중 11건이 소속 체육단체 처리 중이라며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병훈 의원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요구가 현장에서 무시당하는 것은 문체부의 의지 부족과 각 단체의 의도적 무시 탓”이라며 “스포츠윤리센터의 역량 강화와 조사권 강화, 징계요구의 강제적 관철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사인력도 부족… “사건 조사관 16명에 불과”

또 다른 문제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인력도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이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받은 ‘기한 내 사건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754건 중 처리기한 내 처리되지 못한 사건이 지난해 8월 기준 59.1%(44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0조3에는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최장 150일 내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임 의원이 ‘스포츠윤리센터 연도별 신고 및 조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당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201일이었고 심지어 608일에 거쳐 징계요청이 이뤄진 사례도 있었다. 임 의원은 “지나치게 긴 조사기간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안겨줄 우려가 있다”며 “조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조사인력 증원과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다음 장 계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류호정 의원도 지난해 10월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은정 스포츠윤리센터이사를 향해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센터에 접수된 전체 사건이 754개인데 사건 조사관은 16명밖에 안된다”면서 “조사 쪽 인원을 충원하는 방안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다. 이에 당시 이은정 이사장은 “저희가 조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사위원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하면서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있지만 조사 인력이 좀 더 충원이 된다면 신속하고 내실 있는 조사가 이뤄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스포츠 단체의 사용자책임 강화’도 대안

전문가들은 ‘스포츠단체의 사용자책임 강화’도 체육 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1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스포츠계의 부패 실태 및 관련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를 통해 “스포츠 비리에 관해 오직 가해자의 징계처분만으로 사건을 종료하는 것과 같이 개인적 책임으로만 치부해 소위 꼬리자르기식의 사건 마무리에 급급한 해결방안으로 그칠 것이 아니다”라며 “스포츠 비리 근절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서는 스포츠단체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해 스포츠 비리와 관련한 단체의 조직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소속 임원·지도자·선수 등의 비위행위로부터 스포츠단체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징계대상)에 스포츠단체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의 스포츠 비리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는 해당 규정에 스포츠단체의 소속 회원의 관리 및 감독 책임을 신설하고 이를 어길 경우 위원회가 사실 조사 및 위반사항에 대해 소속 체육회 관계단체에게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연구원은 “스포츠단체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내용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신설해 스포츠 비리에 있어서 스포츠단체의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스포츠단체 스스로가 소속 지도자, 선수, 임직원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고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스포츠 비리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는 체육계 인권침해, 비리 신고의무자에 체육단체 임직원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신고의무자로 포함돼 있던 체육단체 임직원을 법률상으로 추가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8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 제2항 중 ‘체육지도자’를 ‘체육단체의 임직원, 체육지도자’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18조의6 제3항에는 ‘누구든지 신고에 대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관련 처벌조항 역시 신설하자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로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행위를 축소·은폐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실을 축소·은폐한 경우 제재하도록 함으로써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문제도 해결돼야”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비리 발생의 원인으로 짚기도 한다. 안정적이지 않은 생활이 일부 지도자들의 금전적 비리로 연결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체육단체 관계자는 스카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지도자들의 처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스포츠 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며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사실 일부 지도자들이 돈을 받는 이유가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은 이유가 가장 크다”면서 “최근 물가도 오른 상태에서 (현재 임금으로) 다인 가구를 먹여 살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금전적 유혹을 견디지 못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체육인 인권 침해와 비위를 근절하고 ‘스포츠 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2022년 8월 시행된 바 있다. 개정법에는 △체육인 징계 이력 확인 제도 확대 △승부조작 가담 체육인 제재 강화 △체육지도자 자격 제도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어른 욕심에 멎든 학원, 장애인 체육... 사회 관심 기울여야

각종 사건·사고와 비리로 얼룩진 것은 프로 스포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장 공명정대해야 할 학원 체육조차도 심심치 않게 각종 사건이 벌어지고 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사회의 미래와 사회 안전망을 위해 필요한 유소년이나 장애인 체육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성공에 매몰돼 퇴색되는 학원 체육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로 피겨의 김연아, 축구의 박지성·손흥민, 야구의 박찬호·류현진, 골프의 박세리·박인비 선수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성공에는 타고난 재능도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어린 시절부터 쏟은 피나는 노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꽃길'만 걸어왔던 것은 아니다. 박지성 선수의 경우 학창 시절 운동부 선배들에게 구타를 당하면서 축구를 했다고 여러 차례 인터뷰 등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그가 박지성 축구센터를 설립한 이유도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더 이상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환경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환경에서 축구하길 바란다'는 것이었다. 2021년 상반기 체육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프로배구 이재영·이다영 선수의 학교폭력 사건처럼 학원 체육에서는 폭력이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축구와 야구 등 구기(球技) 종목 외에도 복싱·유도·태권도 등 무술 종목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스포츠로 자신을 연마하는 수단으로의 무술이 아닌 학교 폭력 등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 모 대학교에서 체육 교육과를 졸업한 B씨(28)는 "유소년 체육의 비리 혹은 부조리 등과 직접적인 연관을 지을 수는 없지만, 대중적인 체육 종목이라도 사소한 사건 하나가 해당 종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면 유소년 체육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학원 체육의 문제점으로 꼽히는 게 이른바 '치맛바람'이다. 최근 공정이 중요시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과거에 비하면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암암리에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학교 체육 관련 인사들은 지적한다. 자기 자녀를 돋보이고 성공시키기 위한 부모의 비뚤어진 애정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과거 축구 유학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을 때, 교내 축구부를 거쳐 프로팀에 스카우트된 후 프로에 데뷔하는 것은 일종의 공식과도 같았다. 프로팀 스카우트를 위해 팀에서 주전으로 뛰어야 했고, 주전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감독과 코치의 눈에 들어야 했다. 하지만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주전 자리를 꿰차는 것보다 학생의 부모들이 감독과 코치에게 금품을 건네는 등의 방식으로 자녀를 경기에 뛰게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지적된다.

지난해까지 유소년 축구팀 코치를 맡던 A씨(27)는 "대회를 나가면 학부모들은 서로 자신의 자녀가 경기에 더 많이 뛰기를 바라는 마음에 (평소) 코치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SNS를 통해 기프티콘(선물 교환권)을 보내는 등 보이지 않는 경쟁이 끊이지 않는다"면서 "감독이나 코치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금품을 거절하거나 무시하면 금방 뒤에서 코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빠르게 퍼진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엘리트 체육 매몰에 사회·장애인 체육 '뒷전'

한편, 학원 체육이 축구·야구 등 몇몇 종목의 프로 선수를 배출하기 위한 '엘리트 체육'에 매몰되면서 정작 사회 체육은 등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가운데 특히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할 장애인 체육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다.

장애인 체육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패럴림픽'이다. 흔히 패럴림픽을 올림픽 폐막 이후 열리는 부수적 이벤트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처럼 장애인 체육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대중적인 체육 종목이 역동적인 반면 장애인 체육은 비교적 정적이고 흔히 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체육은 단순히 대회 입상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닌 건강을 유지하고 움직임을 통해 신체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다. 장애인의 체력과 운동기능이 비장애인보다 낮기 때문에 적절한 체육 활동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만성 질환이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게 된다. 그렇기에 장애인 체육은 단순한 체육 활동을 넘어 건강한 삶을 이어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이에 다양한 단체에서는 학생들 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체육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충남 홍성군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경기부)는 지난해 8월 재능기부를 통해 장애인스포츠지도사와 함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체육 종목 체험을 하는 등 개선 교육을 진행했다. 휠체어펜싱과 탁구 등을 직접 접하며 장애인들의 체육 활동을 이해하고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경성대 스포츠건강학과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무용단 '품(品)'은 스스로가 변화하고 강해져야 남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는 취지 아래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똑같은 교육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문화·예술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품' 무용단장인 최정화 교수는 "무용단을 운영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같다'는 인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8명의 단원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100여 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장애인 체육 문화 활동을 통해 인식을 개선하고자 앞으로도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체육에 대한 지원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시와 화성시의 장애인 체육회는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김포시는 지난해 7억4591만 원이었던 장애인체육회 관련 예산을 올해 9억2393만 원으로 24% 상향시키며 장애인 체육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왔다.

장애인 단체를 운영 중인 한 전문가는 "결국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인격체로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한다"며 "이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장애인들에게 편하고 자연스럽게 접근하기 위해 공연이나 체험 활동이 늘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겨울 대표 스포츠 불황 그늘... 부활 몸부림

'겨울철 대표 스포츠' 명소인 국내 스키장에 불황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한때 겨울시즌 680만명이 넘었던 스키 인구는 최근 140만명 수준까지 떨어져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는 형국이다.

코로나 팬더믹에 예측하기 힘든 기후변화 리스크로 인해 운영을 중단하거나 아예 폐업하는 스키장까지 생겼다.

2009년 전국 17곳에 이르던 스키장은 현재까지 6곳이 폐업 또는 운영을 중단했으며 이중 절반은 최근 3년 내 문을 닫았다.

◇ 벼랑 끝 내몰린 스키장...코로나 팬더믹에 여건 변화 급물살

한국스키장경영협회에 따르면 국내 스키장 이용객 수는 집계가 시작된 1999~2000시즌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 꾸준히 증가했다. 2011~2012시즌 680만명을 돌파, 겨울철 가장 대중적인 스포츠로 성장했다. 국내 스키장은 1975년 평창 용평리조트의 첫 개장 이후 2009년 알펜시아 스키장 등이 잇따라 개장하면서 한때 전국 17곳에서 문을 열고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스키장 이용객이 정점을 찍었던 2011년 이후 조금씩 감소세를 보이더니 2020~2021시즌에는 140만명으로 곤두박질쳤다. 스키 이용객 수를 파악한 이래 역대 최하로 내려간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때문이다. 코로나19로 2020~2021시즌 매출은 약 376억원으로, 한때 가장 매출 치솟았던 2012~2013시즌 1천739억원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2021~2022시즌 380만명으로 회복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급격한 여건 변화는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2009년 17곳에 이르던 전국의 스키장은 지난해 운영을 중단한 경기 포천의 스키장 등 모두 6곳에 이른다. 폐업한 스키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최근 3년간 문을 닫아 사태의 심각함을 드러냈다. 스키장 업계는 코로나 팬더믹 충격에 환경적, 정책적 변화를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겨울철 온난화 등 기후 변화는 스키장 운영을 벼랑 끝으로 밀어낸 주범이다. 겨울철 기온이 점점 올라간 탓에 스키장 영업 일수가 줄어들어 2019~2020시즌 12~1월 기온은 평년보다 2.2도 이상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슬로프의 운영이 어렵고, 관리 비용도 급증하자 운영 기간을 단축하는 등 경영난에 직면했다. 설상가상으로 토요일 공휴일 지정과 방학 축소 등 급변하는 사회 분위기는 스키장을 침체의 늪에 빠져들게 했다. 우리 사회를 뒤흔든 대형 사고에 안전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학교 스키캠프가 점점 줄어들고 인터넷 게임 등 겨울철 놀이문화의 다양화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 정부가 동계스포츠 인구 3억 명 육성을 목표로 스키장을 늘리는 정책 지원에 반해 국내는 규제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 통합시즌권 등 변화 시도하는 스키장...위기 돌파 안간힘

스키장 업계는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스키를 타지 않더라도 스키장에서 다양한 겨울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거나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선보였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이후 업체마다 다양한 이벤트로 고객 유치전을 벌였다. 정선 하이원리조트와 평창 용평리조트, 원주 오크밸리, 횡성 웰리힐리파크는 'X4+ 시즌 패스'를 만들어 판매했다. 같은 가격으로 4개 스키장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근 달라진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의 겨울스포츠 트렌드에 맞추고 스키어에게 더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해 위축한 스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골프장 한번 갈 비용이면 한 시즌 내내 4개 스키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시즌 패스를 구매하면 13세 이하 자녀 무료입장을 비롯해 객실 등 다양한 부대시설 할인권도 제공했다. 이같은 혜택에 이번 시즌 패스는 지난해 3곳의 스키장이 함께 운영한 X3 시즌권보다 20% 이상 판매가 이뤄졌다는 게 한 스키장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비발디파크 스키장은 추운 날씨에 매표소에서 줄을 서지 않아도 사전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 더 빠르게 무인 키오스크에서 발권이 가능하게 했다. 또 2017년부터 국내 최대 규모의 눈 테마 놀이공원 '스노워랜드'(Snowyland)를 만들었고, 다른 스키장에도 경쟁력으로 도입했다. 아울러 일부 스키장은 스키어들이 원하는 시간대,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리프트권 시간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곤지암리조트는 한국 스키장 최초 앱으로 스키장의 '발권, 장비대여, 출입, 리프트'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 킷 패스'를 선보였다.

이 밖에 일부 스키장은 시즌권 종류에 따라 객실 무료와 장비 대여, 전용 주차 공간제공, 월 이용권(Monthly pass) 시즌 패스 등 파격적인 혜택을 내세워 본격적인 스키어 유치전을 펼쳤다. 조원득 한국스키장경영협회 사무국장은 "스키장 업계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며 "스키장이 스키만 타는 곳에서 벗어나 가족 중심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으로 바뀌고 있으며 일부는 눈과 놀이공원을 결합한 겨울철 놀이동산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나오면 올림픽 안 나가” 우크라이나, 스포츠 외교도 강경 대응 예고

우크라이나가 2024 파리올림픽 보이콧을 거론하고 나섰다. 자국을 침공한 러시아와 조력국 벨라루스의 올림픽 출전 금지 요청이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자 더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올림픽 관련 소식을 전하는 온라인 매체 '인사이드 더게임즈'는 29일(한국시간) 우크라이나 올림픽위원회(NOCU)가 비상총회를 열고 러시아, 벨라루스 선수들이 파리올림픽에 참가할 경우 우크라이나의 올림픽 불참 여부를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OCU는 오는 2월 3일 비상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0 도쿄올림픽 남자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87kg 금메달리스트이자 현재 우크라이나 의회 의원으로 활동 중인 잔 벨레니우크를 통해 이 소식이 알려졌다.

NOCU가 파리올림픽을 불참한다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입장도 난처해진다. IOC는 평화의 제전을 표방하는 올림픽에 뚜렷한 이유 없이 불참하는 국가를 제재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2020 도쿄올림픽에 불참하자 IOC로부터 2022년 말까지 북한의 국가올림픽 위원회 자격을 정지하고 모든 국제 대회 참가를 불허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1년 가까이 전쟁을 치르는 중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러시아의 모든 국기는 피로 얼룩졌다"며 중립국 소속이라고 해도 러시아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분명하게 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도 러시아 스포츠 선수들의 파리 올림픽 출전을 금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SNS를 통해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바람과는 다르게 IOC는 러시아, 벨라루스 선수들이 중립국 혹은 중립 단체로 파리올림픽에 출전할 길을 사실상 터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도 오는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하계 아시안게임에 러시아, 벨라루스 선수들을 초청할 뜻을 제안한 가운데 IOC가 환영과 감사로 화답한 것도 우크라이나에게는 좋지 않은 기류다.

바딤 구차이트 NOCU 위원장은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계속되는 한 러시아, 벨라루스 선수들이 국제 대회에 출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이다"라며 "만일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는 올림픽을 보이콧하고 참가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주간 스포츠 소식

강원 동해안 '4계절 전지훈련·스포츠대회 명소' 주목

<https://www.yna.co.kr/view/AKR20230130045100062?input=1195m>

대한체육회,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민간위원 추천 대상 9명 확정

<http://www.foodn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343625>

대한체육회, 러시아·벨라루스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 공문 접수...“찬반 여부 고심중”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592973&ref=A>

신체 손상 병역 면탈 대부분이 체육선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592659&ref=A>

'축구판 고척돔' 국내 최초 실내 축구장 탄생했다...체육진흥공단 경주에서 준공식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301300100190900023715&servicedate=20230130#rs>

삼척 도계에 복합체육문화센터...81억 들여 내년 완공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130500060&wlog_tag3=naver

공연장·영화관·실내체육장서 마스크 벗는다...문체부 "자발적 착용" 당부

<https://www.news1.kr/articles/4937291>

파주시 운정3지구에 다목적체육관 들어선다...2024년 12월 준공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3013013223312973>

삼산월드체육관서 처음 열리는 올스타전, 시작 전부터 후끈 [V리그]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1290027>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